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2017.12.04)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은 맞으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올바른 방안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 사교육걱정은 박근혜 정부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이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 ▲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후속 대책으로 대학을 진단하여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게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음.
- ▲ 이번 시안 핵심은 대학 정책이 ‘평가를 통한 통제’에서 ‘진단을 통한 지원’으로 ‘사업비 중심 재정 지원’에서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가 있음.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맞으나 대학교육이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 고등교육개혁 전문가, 교육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단사업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공립 통합 3단계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학 즉각 추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하여 그동안 사적 영역이었던 대학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학운영의 공공성 뿐 아니라 대학입시의 공공성을 위한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여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임.
- ▲ 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학교육 정상화 없이는 대입 고통은 해결될 수 없고 초·중·등학교 교육 혁신은 완성될 수 없음. 따라서 대학 체제 문제를 몇몇 행정 관료와 고등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학교육 정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사교육

걱정은 대학체제 개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11월 30일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 개편 계획(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향의 대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사교육걱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또 퇴출 대학을 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은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한 대학교수의 75.0%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입학정원, 재정지원사업 제한, 퇴출 등 대학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학법인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유로 대학발전기금 강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연구 이외에 무리한 활동을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과 여러 대학교육 전문가와 교육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의 대학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을 6 등급으로 나누었던 것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 감축에 대한 자율성과 일반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또 평가지표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인 책무성 지표 부재, 비정년트랙 교원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대 대상 법인 책무성 지표 포함, 정년/비정년 트랙 실태를 진단하여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PRIME, CORE 등 사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그 사업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 학교에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정책이 ‘평가를 통한 통제’에서 ‘진단을 통한 지원’으로 ‘사업비 중심 재정 지원’에서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 기본 역량진단(안) 비교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안)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구조개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목적 및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감축에 초점 •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 • A등급(16%)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 재정 사업 연계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및 지원 •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합리적 수준 감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권고(2만 이내)와 학생의 선택 조화
정원 감축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6등급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 선정

출처: 교육부(201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 개편 시안 발표 보도자료

획일적 평가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평가 중심 정책’은 효과는 없고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 개혁을 추진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 흐름임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황폐화된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만으로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등교육개혁전문가, 교육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이 황폐화 된 원인은 교육 관료와 교육부에 종속된 대학 관계자 협의체 및 소수의 고등교육 전문가들에게 대학교육을 맡기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학교육이 개혁된 것은 68혁명을 통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학교육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나섰다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진단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고등교육개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학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사립대 위주의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해결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학생이 가고 싶은 수준 높은 국공립대가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통합 3단계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 확충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추진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이 사적 이익의 영역이 아닌 미래사회를 위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기에 적합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대학 운영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만 주던 좋은 고등교육기회를 대학수학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일정한 내신과 수능 성적이 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많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공정성을 넘어 공공성을 추구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학교육 정상화 없이는 대입 고통은 해결될 수 없고 초중등학교 교육 혁신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입 경쟁으로 입시 중심 공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온 국민이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대학체제와 교육에는 무관심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대학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대학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으며 입시고통과 초중등 교육 혁신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대학체제 개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 12.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